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81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15.

발 의 자 : 백선희 · 이수진 · 신영대
김재원 · 이해민 · 이학영
신장식 · 김선민 · 허영
김성환 · 황명선 · 서왕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이 ‘유가족통합지원센터’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.

그런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경우 담당하는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업무에는 전문성이 있으나, 유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그 설치·운영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(행정안전부장관)으로 일원화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

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3 신설)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3(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등)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(이하 이 조에서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 행정처리 지원
2. 사망자 신원확인 및 장례 절차 지원
3. 재난 상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
4. 심리상담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·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4조의3(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등)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(이하 이 조에서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 행정처리 지원</u> <u>2. 사망자 신원확인 및 장례 절차 지원</u> <u>3. 재난 상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</u> <u>4. 심리상담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</u> <u>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</u> <p><u>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</u></p>

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
관의 장 및 민간기관·단체의
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
른 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
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한다.